

# 중국의 부상과 미·일동맹

: 상호인식과 전략 및 쟁점을 중심으로

설규상(한국의국어대학교)

## 논문 요약

중국은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역동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오늘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제2의 경제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수 년 간에 걸쳐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역내 질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행태를 견제하고자 하는 역내 주요 세력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부여하는 의미와 함께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역내의 또 다른 두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일본이 동맹 구조 내에서 취해온 조치 및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로부터 이 글은 중국의 부상과 세력 투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동맹에 기반을 둔 공조를 강화해 오고 있고, 중국 또한 공세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3국 모두 그것이 파국적 국면으로 비화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주제어 : 중국의 부상, 미·일동맹, 미·중관계, 중·일관계, 동아시아, 지역안보

## I. 문제 제기

오늘날 국제관계 영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찰자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형성된 중국의 정치·경제·외교적 역량이 제반 분야에서 세력 지형을 바꿔놓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과 수 년 전 중국의 위상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G2(the Group of Two)라는 조어가 이제는 상용어가 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사계에서는 글로벌 세력으로서 중국의 미래의 진로와 그 여파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예측을 하고 있다. 예컨대 일각에서는 조만간 미국의 시대가 종식을 고하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는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세력전이는 아니더라도 중국이 증대하는 영향력을 점차 국제체제의 규칙과 양식을 자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데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예측과 전망은 서로 다르더라도 국제질서의 향방과 관련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즉, 중국이 향후 기존 질서에 불만족하는 패권 도전 세력으로써 국제체제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행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안정 추구 세력으로서 국제체제의 순기능적 이행을 떠받치는 행위자가 될 것인가? 중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력들과의 대결과 충돌 속에서 그러한 시도가 한계에 봉착할 것인가? 그와 같은 과정에서 세계적 패권세력인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고, 상호작용할 것인가?

한편,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차원의 주도 세력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상하는 중국이 현상에 불만을 갖는 세력으로 인식될 경우 냉전 시기 소련처럼 미국의 새로운 봉쇄전략 목표

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해왔다.<sup>1)</sup> 또 다른 일부에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 시대가 불가피하게 종식되겠지만 미국 주도로 형성된 질서와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대결에서 득을 보는 것은 중국일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sup>2)</sup>

그런데 이와 같은 진단들은 동아시아 지역 정세 및 동학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즉, 중국의 부상이 역내 세력관계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기존 지역 안보 질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문제의 출발점으로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역내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의 부상이 의미하는 바와, 그러한 부상이 지역 정치 과정에 깊이 관여해 온 미국과 그 우방국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게 되었는지부터 고찰해보고자 한다. 보다 강하고 영향력 있는 중국이 역내 주요 행위자들의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어 모종의 대응조치를 유발하도록 자극해 왔는가, 아니면 지역 안정화와 공동이익을 촉진하는 세력으로 입지를 다짐으로써 호혜적 관계를 증진하도록 해 왔는가? 이는 중국의 부상이 역내 정치과정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는 또 지역 정치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로 엮여 있는 다른 주요 행위자인 일본의 전략과 선택 및 대응방식과도 불가분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상기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필자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한 축으로, 그리고 역내에서 이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핵심 동맹으로서 미국과 일본을 다른 축으로 하여 이들 간 상호인식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San Pablo-Baviera, Aileen, "The China factor in US alliances in East Asia and the Asia Pacific."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7, no. 2, 2003, p. 341.

2) Ikenberry, John,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Foreign Affairs*, vol. 87, no. 1, 2008, p. 24.

## II. 중국의 부상과 지역 과정에의 함의

주지하듯이, 미국에 이은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선도해 왔던 일본은 한동안 동아시아에서 유력한 지역 발전 모델로 주목을 받아왔다. 미·일동맹체제 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안보 공약에 힘입어 국가 자원을 경제 부문에 집중시켰던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한때 역내 나머지 국가들의 GDP 합을 뛰어넘을 정도로 컸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이 고성장 행진을 계속해 온 반면 일본은 1990년대 시작된 장기 경기 침체로 저성장 늪에 빠지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집단지도체제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시장자본주의를 적극 수용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소위, 중국적 특색을 갖는 사회주의 개념을 제시하며 대외정책 또한 성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왔다. 이로부터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본격 편입한 중국이 200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해 온 '화평굴기(和平崛起)', '화평발전(和平發展)' 등은 그러한 중국의 중단 없는 개발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키워드로 임혀졌다.<sup>3)</sup> 그 결과, 중국은 마침내 2010년에 GDP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의 경제로 부상하였다. 반면 1960년대 말 서독을 제치고 줄곧 2위를 고수해 왔던 일본 경제는 40여년만에 그 자리를 중국에 내주게 되었다.

한때 동아시아의 지역 발전 경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기리기 편대(flying geese)형 성장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 중국은 일본이 선도하는 기리기 편대 후미에서 앞서 가는 기리기 떼를 쫓아가는 위약한 존재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이처럼 역동적으로 성장하자 1990년대 말부터 이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재고되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일부에서는 중국이 이전

3) 김성환·김홍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군사전략 변화." 『전략연구』 통권 제39호, 2007, p. 57.

십 수 년 동안 시현해 왔던 것과 같은 속도로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다음 세기 일정 시점에서 미국 경제를 추월해 세계 경제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부에서는 2050년 이전에 양국간 경제적 수준이 동등해질 것으로 예상해 왔다.<sup>4)</sup> 또 미국 소재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중국이 2041년에는 세계 최대 경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sup>5)</sup>

<표 1> 중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연도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중국	14.2	13.1	10.0	7.8	8.4	9.0	10.1	12.7	9.6	10.5	7.7
일본	0.8	0.9	2.6	-2.0	2.3	0.3	2.4	1.7	-1.0	4.7	2.0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한편, 이상과 같이 일본과 대비되는 추세는 군사 부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록 국내정치적 제약으로 GDP 대비 규모 면에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경제적 역량을 반영하여 1990년대 일본의 군사비 지출은 절대 액수 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4번째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군사비 지출 순위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7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부터 일본이 군사비 지출 비율을 축소 또는 동결해 온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고속 성장을 바탕으로 그 규모를 대폭 늘여왔다. 그 결과 1990년대 말까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2005년에 일본을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sup>6)</sup> 이후로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일본 군사비는 최근까지 제 자리에 머물러 있어 격차가

4) Zhao, Quansheng, "America'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and Sino-US Relations."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3, no. 2, 2005, p. 8.  
 5) Wilson, Dominic and Roopa Purushothaman,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Global Economic Paper No. 99*, New York: Goldman Sachs, 2003, p. 10.  
 6)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Stockholm Peace Research Institute*(online), <http://milexdata.sipri.org/files/?file=SIPRI+military+expenditure+database+1988-2013.xlsx>(검색일: 2014.4.12).

더욱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한 전략연구소는 향후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방위비 지출률을 유지할 경우 2025년에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에 필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sup>7)</sup> 이는 곧 머잖아 중국이 경제력에 이어 군사력 면에서도 미국 다음의 제2의 세력으로 부상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표 2> 중국과 일본의 군사비 지출 비교

(단위: 10억 US\$; 2011년 고정가격)

연도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중국*	23.06	26.34	34.45	45.42	57.39	71.50	96.78	128.73	147.27	171.38
일본	56.83	57.00	59.43	60.25	61.46	61.29	60.57	59.74	60.45	59.43

출처 : Stockholm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 단, 중국의 군사비 지출 통계는 SIPRI 추정치

따라서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일부에서는 신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2차대전 이후 지속되어 왔던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세력의 전성기가 중국의 부상으로 종식을 고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동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8)</sup> 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회자되어 온 중국의 성공담은 미국이 그동안 국제문제를 접근하는데 자기이익(self-interest)에 집착하는 행태를 보여 온 데 반해 중국은 집단이익(collective interest)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왔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우호적 힘을 더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매력공세로 영향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sup>9)</sup>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최근 수년간에 걸쳐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경제·군사

7)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3*, 2013, p. 42.  
 8) Sutter, Robert, "Assessing China's Rise and US Leadership in Asia - growing maturity and bala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9, no. 65, 2010, pp. 593-594.  
 9) Kurlantzick, Joshua,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2007, New Haven: Yale University.

적 영향력 확대가 중국의 의도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전략 분야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 판도가 중국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중국이 경제력과 이를 바탕으로 강화된 외교 및 군사력을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잠식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sup>10)</sup> 이는 곧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하여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틀 내에서 역내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으로 하여금 보다 공세적인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유발하고 있다.

### III. 미·일동맹의 성격과 역할 전환

냉전 시기 동아시아 지역 정세의 중추 역할을 해 왔던 미·일동맹은 냉전 종식 이후 지역 안보 환경 및 국별 전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동맹구조가 변화함으로써 미 군사력이 일본으로부터 철수할 경우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군사적 관여가 약화됨으로써 전략 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 역내 국가들의 입장에서, 미군 철수는 일본이 재무장화를 통해 자위대를 직접적으로 대외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보다 독자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됨으로써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서 일본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 옵션을 고려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까지 우려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주일 미군이 그동안 일본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화 보장자

10) Sutter, Robert, "Assessing China's Rise and US Leadership in Asia - growing maturity and bala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9, no. 65, 2010, p. 602.

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해 온 역내, 특히 친서방 국가들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미·일동맹의 유용성을 인정해 왔다.

한편, 소련 붕괴 후 냉전 질서에 입각한 안보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에 따라 미·일동맹도 새로운 전략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변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책결정자들은 동맹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일본 방위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만, 비확산, 반테러 등 일련의 도전요인들에 대응하는 보다 광범위한 안보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꾀하였다. 양국은 이러한 도전요인들을 공동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양국의 공통 이익에 속하는 부분으로, 미국은 일본의 지원 아래 상호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일본은 이 분야들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고려를 지지함으로써 안보 이익이 보다 잘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1)</sup> 하지만 양국의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미·일동맹이 성격을 전환시켜 감에 따라 양국간 안보조약 유지가 오히려 지역 정세 불안정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동맹 내에서 역할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 9.11 테러 이후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미군 주도 연합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함으로써 자위대의 역할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시켰으며,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자위대를 이 지역에 파병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양국간 동맹 협력에 관한 논의는 정상회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진행되어 왔지만 특히 이를 주도해 온 것은 안보협의위원회(SCC)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해 수시로 전략 환경을 검토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보통 "2+2 안보회의"로 지칭되는 이 위원회는 2000년대 진입 이후 동맹관계의 진로를 논하는

11) Suzuki, Motoshi, "The politics of coordination and miscoordination in the post-Cold War United States-Japan alliance: from a Japanese perspectiv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0, no. 3, 2010, p. 499.

중심 부분으로 정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합의된 사항을 통해 미·일동맹의 방향과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12월, 9.11 테러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에서 양국은 테러가 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일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주도한 반테러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양국은 또 이 회의에서 대량과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등 운반체제의 확산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방어와 억지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는데 있어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하였는바, 이로부터 1년 후인 2003년 12월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이 미국과 미사일 방어능력 개발 및 배치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후로 양국은 방위산업 협력, 차세대 미사일 방어 공동개발계획 등을 추진해 왔다.

한편 2005년 2월 양국은 공동의 글로벌 전략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동맹을 전통적인 일본 방위와 동북아 지역 안보에 더하여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공동의 전략 목표로 양국은 중국의 이해와 관련된 대만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 중국의 군사 문제 관련 투명성 제고, 북한핵 프로그램·탄도미사일 활동 등 북한 관련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통한 러·일관계의 완전 정상화,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촉진, 해상교통로의 안전보장 유지 등을 설정하였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양자 안보 및 방위협력 활동의 주요 분야로서 방공, 탄도미사일 방어(BMD), 반확산 작전, 반테러, 해상교통로 안전보장 유지 작전, 평화유지활동 및 타국의 평화유지 노력을 위한 역량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곧 미·일동맹이 기능적으로 군사동맹의 성격을 뛰어넘어 다층적 협력동맹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국간 일련의 동맹관계 재조정은 2006년 6월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21세기 글로벌 협력동맹”으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비록 이후로 한때 일본 국내정치 구도 변화로 동맹관계 재조정 과정이 잠시

정돈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양국관계의 흐름을 본질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었다. 즉, 2009년 8월말 총선 승리로 54년만에 정권을 인수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부는 그동안 자민당 정권이 유지해 왔던 전통적인 미국 중시형 대외정책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아시아 중시정책을 표방하였다.<sup>12)</sup> 요컨대 2009년 10월 말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 국회 답변에서 이제까지의 미국 중심주의 외교를 대미 의존형 외교로 보고, 미국과의 보다 동등한 동맹을 요구하면서 양국간 안보조약의 일부를 개정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이 때문에 사계에서는 미·일동맹이 이완되고 있으며, 향후 미·일관계의 진로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sup>13)</sup> 하지만 그와 같은 전망은 같은 해 11월 중순 양국 정상회담에서 동맹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빠르게 수그러들었다. 양국간 갈등은 이듬해 5월 양자 안보협의위원회에서 미군 재조정 이행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고, 특히 오키나와 밖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민주당 집권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후텐마 기지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봉합되었다.

현재 일본이 자국 안보의 기본 축을 미·일동맹에 두고 있음은 최근 수년 사이 발표된 일본의 방위 관련 문건을 통해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10년 12월 발표한 방위계획대강에서 일본 정부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은 일·미 안보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조약을 유지해 왔으며, 일·미동맹은 일본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데 있어 여전히 필수적이다”고 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동대강은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안보협력과 관련하여 아·태지역을 더욱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안보협력 네트워크로 한국, 호주,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필요성

12) 김종훈, “미국의 국방기획과 미일동맹.” 『한일군사문화연구』 제9집, 2010, pp. 88~89; 송화섭, “미일동맹의 조정과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 - 예상되는 문제점과 정책방향.” 『전략연구』 통권 제48호, 2010, p. 15.

13) 정성운, “미일동맹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통권 제50호, 2010, pp. 54~56.

을 언급하였다.<sup>14)</sup>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과 노선을 같이 하는 것으로, 2004년판 방위계획대강이 일본과 지역 안보를 국제적 안정과 연계시켜 봄으로써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초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또 2013년 12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포괄적 기본지침으로 마련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본 정부는 “일·미동맹이 ... 일본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불가분적 역할을 해 왔다”며, 일·미동맹이 “일본 안보의 초석”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sup>15)</sup> 이처럼 오늘날 미·일 안보동맹은 미국의 태평양 정책의 구심으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 IV. 상호인식과 전략관계

한편, 냉전 시기에 소련을 봉쇄하려는 미국에 전략적으로 협력했던 중국은 미·일동맹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중국은 미·일동맹을 위시해 역내에서 양자동맹을 통한 미군의 전진배치가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베트남, 인도, 몽골,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련에 대항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중국은 미·일동맹체제가 일본을 평화헌법 내에 묶어둠으로써 군사력 증강과 핵개발 의도를 차단해 군사적 역할을 제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sup>16)</sup> 따라서 중국은 미·일간 마찰이 커지는 것도 미국의 일본에 대한 영향력

을 약화시켜 동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하고, 결국 일본의 재무장화를 부추길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sup>17)</sup>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냉전 종식으로 공동의 전략적 적국이 소멸되고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로 부상하는 등 안보 환경이 바뀌면서 동시에 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적극적인 군사현대화 계획 추진과 함께 적성국에 대한 무기판매, 개도국에 대한 미사일 기술 제공, 대만 및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회복주의적 주장 등 독단적 행동을 확대해 나가자 이를 잠재적 국제질서 불안정화 세력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 내 군사·안보 관련자들은 21세기에 진입한 이후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전략적(geo-strategic) 우위에 도전하는 주요 경쟁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 중반 이래로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관련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그것이 지역 세력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들 보고서는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뢰, 공격용 잠수함, 해상 타격 항공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밀 전자 전투력 등 반접근, 지역거부능력 향상으로 미국 군사력의 양적, 기술적 및 작전적 이점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주둔 미군을 증강할 것을 권고해 왔다.<sup>18)</sup>

예컨대, 2008년판 미 국방부의 ‘중국의 군사안보 발전에 관한 의회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세계체제의 안정과 탄력성 및 성장을 위한 보다 큰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되도록 고무하고 있으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힘의 사용 방법 등 불확실성이 중국의 미래의 진로를 둘러싸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9)</sup> 또 2013년판 연례보고서는 중국이 미국

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 for FY 2011 and beyond*, 2010.

15) “National Security Strategy.” *Cabinet Secretariat*(online), 17 Dec. 2013, <http://www.cas.go.jp/jp/siryoyou/131217anzenhoshou/nss-e.pdf>(검색일: 2014.5.16).

16) San Pablo-Baviera, Aileen, “The China factor in US alliances in East Asia and the Asia Pacific.”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7, no. 2, 2003, pp. 339~340.

17) Garrett, Banning and Bonnie Glaser, “Chinese Apprehensions about Revitaliz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sian Survey*, vol. 37, no. 4, 1997, p. 385.

18) Castro, Renato Cruz de, “The US-Philippines Alliance: An Evolving Hedge against an Emerging China Challeng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1, no. 3, 2009, p. 402.

19)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2008, p. I.

을 자국의 부상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방해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배적인 지역 및 글로벌 행위자로 보아 왔다고 평가하면서, 점증하는 군사적 능력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둘러싼 중국의 투명성 결여가 역내에서 중국의 의도에 관한 우려를 증대시켜 왔으며 군사적 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우려가 고조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sup>20)</sup>

이에 따라 오늘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의 경제 및 군사적 부상으로 유발된 지역전략의 변화에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앞의 보고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당장 중국을 절박한 안보 위협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 안보 도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역내에서 현상유지를 잠식하는 보다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도전세력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여를 취할 것임을 시사해 왔다. 이 경우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만문제 등 역내 정세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국 관련 지역 현안에 보다 깊숙이 개입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미·일동맹을 포함해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동맹을 활용하고자 할 개연성이 높다. 2013년 11월 중국이 동중국해에 일본과 분쟁중인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지역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고 정찰활동을 개시하자 이 지역에 B-52 폭격기를 출격해 무력시위를 하는 한편, 방공식별구역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출범 이후 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방해 온 오바마 행정부는 그와 같은 정책이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2009년 11월 그의 첫 번째 동아시아 순방길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관계를 중시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20)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the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2013, p. 16.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듬해 11월 서울 개최 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행한 그의 두 번째 아시아 순방 중에도 중국의 의도에 의문을 갖는 동남아 국가들을 달래기 위해 봉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안심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언명에도 불구하고 미·일 안보동맹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역내 군사적 투사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경계심을 갖고 있다. 흔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국에 대해 역지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취해지는 정책은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공세적 대응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연속적인 군사적 대응 능력 추구를 자극하는 딜레마를 유발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안보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보 딜레마'로 칭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미·일동맹이 공동의 안보 역량 제고를 위해 군사적 협력 강화를 표방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중국에 대해 위협으로 비쳐지게 되고 중국의 공세적 대응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맹이 추구하는 전략이 안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거나 봉쇄하려 한다는 의심을 일소하기 위해 공세적 대응자세는 물론이고 중국의 분노와 우려를 불필요하게 자극해 온 중국위협론과 같은 반중국적 수사까지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sup>21)</sup>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군사적 능력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안보조약의 관할권을 대만해협으로 확장하고 동북아에서 합동군사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것 때문에 미·일동맹의 본질이 수비용 방패로부터 공격용 창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sup>22)</sup> 더욱이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판매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티벳 문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조치 등이 자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21) "Pivot to Asia: Prepare for Unintended Consequence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online), 13 Apr. 2012, <http://csis.org/publication/pivot-asia-prepare-unintended-consequences>(검색일: 2014.4.28).

22) Suzuki, Motoshi, "The politics of coordination and miscoordination in the post-Cold War United States-Japan alliance: from a Japanese perspectiv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0, no. 3, 2010, pp. 503~504.

간섭이며, 신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과 일본과의 안보 유대 강화가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기 시작하였다.<sup>23)</sup> 또 일본에 대해 중국은 일본의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 및 미국과 함께 추진해 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계획 등 군사적 역량 강화 추구가 전후 줄곧 표방해 온 평화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군국주의로 재부상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해 왔다.<sup>24)</sup>

중국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중국의 군사력 신장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적극적인 군사 현대화를 추진해 오면서도 그것이 방어적 차원에서 자국의 안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뿐 타국에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다.<sup>25)</sup>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은 중국이 1990년대 중반 이래 빠른 속도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배치를 통해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및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유화적 언급이 저의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해 왔다.<sup>26)</sup> 이에 일본은 2004년 방위계획지침에서 처음으로 북한과 함께 중국을 핵심 안보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후 수시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지역정세뿐만 아니라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중국의 군사비 예산 및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는 일본으로 하여금 그러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더욱이 중국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대내적으로 일본 보수파 정치인들로 하여금 지역 정세 불확실성 증대를 구실로 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보통국가화’ 여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헌법 9조를 자국의 군사 ‘보통국가화’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로 인식해

23) San Pablo-Baviera, Aileen, “The China factor in US alliances in East Asia and the Asia Pacific.”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7, no. 2, 2003, pp. 340~341.  
 24) Atanassova-Cornelis, Elena, “The Political and Security Dimension of Japan-China Relations: Strategic Mistrust and Fragile Stability.” *Pacific Focus*, vol. 26, no. 2, 2011, p. 171.  
 25) 김성한-김홍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군사전략 변화.” 『전략연구』 통권 제39호, 2007, p. 54.  
 26) Atanassova-Cornelis, Elena, “The Political and Security Dimension of Japan-China Relations: Strategic Mistrust and Fragile Stability.” *Pacific Focus*, vol. 26, no. 2, 2011, pp. 169~170.

온 이들은 개헌을 통해 헌법 9조의 내용을 바꿀 필요성을 언급하여 왔다. 이들은 또 이를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국위협론’을 부각시키거나 국제적 안보 역할을 주창하여 왔다.<sup>27)</sup>

그런데 상호관계에서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이 이러한 일본의 태도와 의도에 미국이 연루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미·일동맹 내에서 자국의 세력을 견제하고 역내 군사적 주도권 유지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지원 아래 진행되어 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sup>28)</sup>

결국 이처럼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에 직면하여 미국과 일본이 동맹 구조 내에서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인식과 접근, 그리고 중국의 미·일 안보동맹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다음에서 논하는 양자 혹은 지역 차원의 여러 쟁점들과 상호 중첩적으로 연계되어 동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 V. 주요 쟁점

### 1.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일본은 1998년 8월 말 북한이 사전 통고 없이 일본 상공으로 로켓 추진체를

27) 예를 들어 2013년 3월 아베 총리는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유엔 차원에서 안보를 실행하는 집단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하려면 이를 가능케 하는 사전 조치로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evise Article 9 for UN military action: PM Abe on TV.” *Japan Press Weekly*(online), 6-12 Mar. 2013, <http://www.japan-press.co.jp/modules/news/index.php?id=5331>(검색일: 2014.8.4.).  
 28) Atanassova-Cornelis, Elena and Carmen Amado Mendes, “Dynamics of Japanese and Chinese Security Policies in East Asia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Stability.” *Asian Politics & Policy*, vol. 2, no. 3, 2010, p. 398.



발사한 때부터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필요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를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였지만 서방 세계에서는 이것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단정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으로 하여금 자국이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 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공동연구를 착수하기로 하였다.<sup>29)</sup>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고이즈미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은 미·일 양국의 21세기 동맹협력 중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결정은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중국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추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자국의 대만에 대한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편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왔다. 요컨대 미국은 탄도미사일 일방어검토보고서(BMDR),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등을 통해서 러시아를 포함해 중국에 대해 전략적 안정성 보장 공약을 반복해 왔다. 또한 미국 의회도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중국이 아닌 미국 정부가 지목해 온 소위 '불량 국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sup>30)</sup>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정책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아태지역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자국의 핵 역지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동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측에 동조하는 분석자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일차적으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미국과

일본의 대만 독립 지원을 저지하려는 제한적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석자들은 중국이 대만을 향해 배치하거나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탄도미사일과 유도 시스템은 대만뿐만 아니라 훨씬 원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이들은 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개발 및 배치해 온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이 이미 대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내의 다른 목표물까지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바, 중국의 미사일 계획이 미국의 태평양에서 세력 투사의 중심 부인 항공모함부대에 위협을 주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31)</sup> 따라서, 중국 군사력의 해외 투사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는 이들은 중국의 공세적 미사일 개발로 불안감을 갖게 된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방어조치로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계획에 참여키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sup>32)</sup> 이러한 점에서 중국이 제한적 군사 목표 수행력 향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미사일 능력 강화와 미국,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간의 문제는 중국과 미·일동맹간 주요 현안이자 갈등 요인이 되어 있다.

## 2. 양안관계

미국은 1995-1996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이후 대만에 대해 무기 판매 확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협력 요청 등을 통해 양자간 군사적 유대를 확대해 왔다. 미국은 대만해협 위기시 이 해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해 중국에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후 중국의

31) "China's military build-up threatens Taiwan." *Newsweek*(online), 18 Sep. 2010, <http://newsweek.com.au/article.php?id=4510>(검색일: 2014.4.25).

32) Atanassova-Cornelis, Elena and Carmen Amado Mendes, "Dynamics of Japanese and Chinese Security Policies in East Asia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Stability." *Asian Politics & Policy*, vol. 2, no. 3, 2010, p. 403.

29) Bisley, Nick, "Securing the "Anchor of Regional Stability"? The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East Asian Secur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0, no. 1, 2008, p. 81.

30) US Congres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3. SEC. 229.*

군사력 증강을 주시하는 가운데 대만과 광범위한 군사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의회에 통고함으로써 확인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액수는 2001년부터 10년 동안 2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Kan 2012, 65-66).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근래에는 2009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1979년 의회가 제정한 대만관계법 이행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고,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대만에 122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갈등이 재현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2010년 10월 중국 국방부장이 아세안+8 국방장관회의의 개막식에서 만난 게이츠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 요청 거부로 표출되었다. 또 2011년 9월 미국 정부가 의회에 대만의 F-16 전투비행대 성능 향상 계획을 밝히자 중국은 양국간 군사교류 중단을 대응 카드로 꺼내드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였다.<sup>33)</sup>

양안관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과도 관련되어 있다. 앞서 논한 것처럼 중국은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자국의 대만에 대한 통제력을 잠식할 것을 우려해 왔다. 하지만 사실 미국이 그동안 대만에 제공해 온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나 미국 주도로 진행중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중국 본토와 대만 간의 지리적 근접성과 중국이 대만을 겨누고 있는 미사일 보유 대수 및 종류를 감안할 때 대만 방위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대만의 방어 미사일 보유나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인한 타격력 약화보다는 대만이 미국의 전략적 방어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갖게 되는 외교적 행동 공간과 이와 관련된 미국 그리고 그 동맹국들, 특히 일본의 양안 관계에 대한 태도라고 보고 있다.<sup>34)</sup>

33) "China warns against U.S. F-16 upgrade for Taiwan." *Reuters*(online), 21 Sep. 2011,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9/21/us-usa-taiwan-idUSTRE78K70420110921>(검색일: 2013.4.25).

물론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도 이 지역에서의 현상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2000년대 초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하며 탈중국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이에 대해 중국이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 가운데 양안간 긴장이 고조되자 파월 미 국무장관은 '대만에서 독립을 외치는 자는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함을 알게 될 것'이라며 대만의 일방적인 현상타파 시도를 경고하였다.<sup>35)</sup>

중국은 외부 세력이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극도로 견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2005년 2월 미·일 안보 협의위원회에서 양국이 대만해협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양국의 역내 공동 전략 목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이 양안관계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곧바로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하며, 양국의 선언은 중국이 용인할 수 없는 국내문제 간섭이라고 비판하였다.<sup>36)</sup> 이어 3월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불허한다는 의지를 밝혔다.<sup>37)</sup>

물론 현재 미국과 일본 양국이 양안관계의 변화나 현상타파 시도는 않고 있으며, 중국 또한 그러한 시도가 없는 한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불사하면서 무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의사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대만해협 위기 때처럼 양안관계가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통일을 핵심이익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34) Christensen, Thomas J.,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1999, p. 66.  
 35) Zhao, Quansheng, "America'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and Sino-US Relations."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3, no. 2, 2005, p. 11.  
 36) Atanassova-Cornelis, Elena and Carmen Amado Mendes, "Dynamics of Japanese and Chinese Security Policies in East Asia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Stability." *Asian Politics & Policy*, vol. 2, no. 3, 2010, p. 402.  
 37) 문홍호, "전환기의 중·일 관계와 대만문제." 『중소연구』 제30권 1호, 2006, pp. 28-29.

대만의 정치적 선택이 중국을 자극할 경우 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이에 미국이 개입할 경우 동맹 내에서 일본 또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담당할 개연성은 상존한다.

더욱이 대만의 특수한 정치적 입지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의도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과 대만은 역내 세력 분포상 중국으로 힘이 경사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하는데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다. 나아가 중국과 안보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만이 중국에 통합됨으로써 세력관계가 재편성될 경우 보다 강력해진 중국이 자국의 안보감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대만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 3. 동중국해 영유권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군사·안보 관련 일본과 중국 간의 최대 갈등 요인이다. 일부 연구자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 태도와 일본의 대응을 양국간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를 비롯해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주장과 공세를 본격화하게 된 것은 에너지 자원 확보 문제와 보다 깊이 관련되어 있다.<sup>38)</sup> 주지하다시피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석유 소비국임과 동시에 제2의 석유 수입국이다. 1980년대 이후 가장 역동적 성장지대로서 연평균 9%대의 성장을 시현해 온 중국은 향후로도 거시경제적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6%대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곧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2월 일본 외무성이 공표한 “센카쿠 열도의 주권에

관한 기본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유엔이 1968년 가을 실시한 연구 조사에서 동중국해에서의 석유 자원 부존 가능성을 제시한 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2007년 비밀 해제된 1971년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 말부터 중국의 이 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중국인들이 자국의 영유권에 대한 증거가 1400년대 초 명 왕조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166년 망명 일본 귀족이 세운 류큐 왕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sup>39)</sup>

하지만 그 유인 및 역사성 여부를 떠나 양국 모두 이 도서에 대한 영유권은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외무성은 상기 기본 견해에서 이 제도들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토주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중국 또한 2012년 국무원 신문판공실을 통해 천명한 자료에서 닌타오와 인접 도서들이 불가분적인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중국은 이 도서에 대해 반론의 여지없는 주권을 향유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역내 국가들 간 영토분쟁을 포함해 센카쿠 열도 분쟁 관련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 제도 분쟁이 동맹 의무 발동 요건이 됨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sup>40)</sup> 요컨대, 2010년 9월 동중국해에서 있었던 일·중 양국 간 충돌사건 후 개최된 양자 안보협의위원회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이 센카쿠 열도와 관련한 상호 동맹 의무를 재확인한 데 이어, 2012 9월 미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문제 소위원회에서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하며 이는 “안보조약 5조”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증언하였다.<sup>41)</sup>

38) 위의 논문, p. 32; 나영주, “센카쿠 제도 분쟁과 미국의 개입 전략.” 『국제정치연구』 제16집 1호, 2013, p. 65 참조.

39) “The Senkaku Islands Dispute: Oil Under Troubled Waters?” *Cryptome*(online), Jul. 2013, <http://cryptome.org/2013/07/guccifer-cia-senkaku.pdf>(검색일: 2014.4.28).

40) 나영주, “센카쿠 제도 분쟁과 미국의 개입 전략.” 『국제정치연구』 제16집 1호, 2013, p. 70.

41)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Sovereignty Issues in Asia.” *US Department of State*(on-

미국 의회가 제정한 국방수권법도 센카쿠 열도의 궁극적인 주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지만 미국이 동 열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3자의 일방적 행동이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지지하고 있다. 또 동 법은 미·일동맹조약 제5조에 입각한 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중국이 동 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무력에 호소할 경우 개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sup>42)</sup> 2013년 10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에서 합의한 2014년 장거리 무인정찰기(Global Hawk) 일본 배치에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 문제를 동맹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자 하는 의지 표현이다. 즉, 태평양에서 해상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 결정된 글로벌 호크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동중국해에서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 4. 남중국해 영유권

중국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4개국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또 다른 최대 현안이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45%를 차지하는 해역으로, 미국과 일본 모두 영유권 분쟁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분쟁이 현재화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43)</sup> 특히 자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가 이 해역을 통과하는 일본의 경우 이곳에서 분쟁이 격화되면 원유 수송선이 장거리를 우회 항행해야 하는 만큼 이로 인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유발된다. 이는 곧 자국 경제의 활력과 관련하여 중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원유 수송로인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민감한 사안임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도서를 두고 영유권 분쟁중인 일본으로서도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공세가 가속화될 경우 이것이 자국의 영토분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분쟁을 주시해야 할 처지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수역을 국제공공재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곳이 어느 한 국가의 독점적 지배나 영향권 아래 놓이는 것을 거부해 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석유회사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며, 군사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접근권이 방해받을 경우 중국 남부 지역 및 동남아 지역에서의 공중 정보 수집 능력 또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일본, 미국 양국 모두에게 지전략적으로(geo-strategically)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만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 확보가 전략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굳히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시 본토 주변 상공 및 해상 진입 거부지대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sup>44)</sup>

그런데 중국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된 것은 동중국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대규모 석유 및 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부터이다. 아직까지 최대 분쟁지인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체계적인 시추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매장량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측에서는 이 지역의 석유자원이 줄잡아 1천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45)</sup> 중국은 199

line), 20 Sep. 2012, <http://www.state.gov/p/eap/rls/rm/2012/09/197982.htm>(검색일: 2014. 4.28).

42) US Congres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3. SEC. 1286.*

43) Rowan, Joshua,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ASEAN,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sian Survey*, vol. 45, no. 3, 2005, p. 415.

44) *Ibid.*, p. 428.

45) *Ibid.*, p. 417. 반면 미국 에너지정보국이 2013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곳의 추정 및 확정 매장량이 석유 110억 배럴, 가스 190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중국측 추정과 대비된다. "South China Se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online), 7 Feb. 2013. <http://www.eia.doe.gov>

2년 영해법(‘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공포하면서 이 지역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95년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 내 미스치프 사주를 점령하고 이곳에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공세적 태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남중국해에서의 다양한 영토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이곳에서 항행의 자유가 유지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내용의 전략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sup>46)</sup> 또 2007년 10월 발표한 ‘21세기 해양세력 협력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국 해양력의 기동의 자유와 접근의 자유를 방해받는 상황도, 필수적인 해상교통과 교역로를 봉쇄하려 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적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sup>47)</sup>

한편 2010년 7월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직후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은 다양한 영토 분쟁을 비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장 국가들 간 협력적인 외교적 과정을 지지하며, 어떠한 국가들의 무력 사용이나 무력 사용 위협에도 반대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남중국해가 자국의 “핵심 이익”이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포위와 자국과 무관한 문제에 부적절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지만,<sup>48)</sup> 미국은 같은 해 8월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를 베트남에 파견해 베트남측과 4일간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이어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세안 지도자들과 남중국해 주권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미국의 행동을 자국의 세계적 강국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중국과,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공세가 자국의 해양정책 및 전략적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관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미국 간 대립적 구도, 그리고 여기에 경제·안보적 이해가 맞물려 있는 일본의 미국과의 동맹 차원에서의 공조 및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향후로도 이 문제가 역내에서 주요 안보 쟁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 VI. 맺음말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이후 줄곧 실용주의 전략 아래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저자세 외교를 전개해 왔다. 따라서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주도적 역할과 관여에 도전하는 것을 삼가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중국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형성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국 내에서 미국의 역내에서의 지배적 지위에 더 이상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식이 점차 조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간 갈등의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현 동아시아 지역에서 갈등 추세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특정 국가의 군사적 모험주의나 패권 다툼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안보 관련 상호불신과 우려, 그리고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형성된 대립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미국과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이 점차 공세적인 방식으로 역내에서 힘을 투사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저지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일동맹과 중국 간에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다수의

//www.eia.gov/countries/regions-topics.cfm?fips=scs(검색일: 2014.6.1) 참조.

46) Castro, Renato Cruz de, “The US-Philippines Alliance: An Evolving Hedge against an Emerging China Challeng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1, no. 3, 2009, p. 401.

47) Department of the Navy,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2008, p. 13.

48) “Why are South China Sea tensions rising?” *BBC News*(online), 3 Sep. 2010,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152948>(검색일: 2014.5.18).

쟁점들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공세적인 지역 전략과 행동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제지하려 하는 한,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자국의 부상을 방해하고 포위하려 한다고 판단하는 한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게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경제·군사적 부상을 기반으로 점차 적극적인 세력 투사를 모색해 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역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 적대적 경쟁국이 아닌 포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수사를 반복해 왔다. 이는 곧 미국이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러한 갈등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화되거나 상호 이익을 극적으로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라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동맹 내에서 일본이 취하게 될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이 자국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보 쟁점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이용해 다루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또 일본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지역 분쟁의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일본은 동맹 틀 내에서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중국-대만 간 갈등이 고조되어 미국이 대만 방위를 결정할 경우, 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어 미국이 모종의 개입을 결정할 경우, 일본은 미국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아베 정권의 헌법 재해석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 결정이 그러한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지원은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피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은 동맹 구조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여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국의 핵심적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직접 전투 병력을 파견하기보다는 대안적

방식으로 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방 진영 국가들과 함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였으나 가장 먼저 이를 해제하고 교역을 재개하는 등 미국 주도의 가치 논리에 입각한 정책에 저항해 온 경향이 있다. 또 1996년 대만해협 위기시 미국이 항공모함을 해협에 파견하였을 때 미국과 달리 일본은 대만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삼가며 한 발 물러서 있었다. 물론 최근 역내에서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다루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 수준을 제고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일본이 과거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할지 여부는 확실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상되는 제3의 요인으로서 일본 대외 정책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차대전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은 경제 이익을 우선하는 실리주의적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일동맹이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표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 내에서 일본의 이념적 신념은 미국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일본이 대중정책을 미국의 전략과 조화시키기로 결정한 것도 그와 같은 조화가 미국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시켜 주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증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sup>49)</sup>

이렇게 볼 때 결론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세력 투사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에 기반을 둔 공조를 강화해 오고 있고 중국 또한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3국 모두 그것이 파국적 국면으로 비화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갈등으로 인한 파국적 상황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어느 쪽의 이익과도 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49) Suzuki, Motoshi, "The politics of coordination and miscoordination in the post-Cold War United States-Japan alliance: from a Japanese perspectiv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0, no. 3, 2010, p. 498.

## 참고문헌

- 김성한-김흥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군사전략 변화.” 『전략연구』 통권 제39호, 2007.
- 김종훈, “미국의 국방기획과 미일동맹.” 『한일군사문화연구』 제9집, 2010.
- 나영주, “셴카쿠 제도 분쟁과 미국의 개입 전략.” 『국제정치연구』 제16집 1호, 2013.
- 문홍호, “전환기의 중·일 관계와 대만문제.” 『중소연구』 제30권 1호, 2006.
- 송화섭, “미일동맹의 조정과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 - 예상되는 문제점과 정책방향.” 『전략연구』 통권 제48호, 2010.
- 정성윤, “미일동맹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통권 제50호, 2010.
- Atanassova-Cornelis, Elena, “The Political and Security Dimension of Japan-China Relations: Strategic Mistrust and Fragile Stability.” *Pacific Focus*, vol. 26, no. 2, 2011.
- Atanassova-Cornelis, Elena and Carmen Amado Mendes, “Dynamics of Japanese and Chinese Security Policies in East Asia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Stability.” *Asian Politics & Policy*, vol. 2, no. 3, 2010.
- Bisley, Nick, “Securing the “Anchor of regional Stability”? The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East Asian Secur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0, no. 1, 2008.
- Castro, Renato Cruz de, “The US-Philippine Alliance: An Evolving Hedge against an Emerging China Challeng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1, no. 3, 2009.
- Christensen, Thomas J.,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1999.
- Department of the Navy,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2008.
- Garrett, Banning and Bonnie Glaser, “Chinese Apprehensions about Revitaliz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sian Survey*, vol. 37, no. 4, 1997.
- Hosokawa, Morihiro, “Are U.S. Troops in Japan Needed? Reforming the Alliance.” *Foreign Affairs*, vol. 77, no. 4, 1998.
- Ikenberry, John,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Foreign Affairs*, vol. 87, no. 1, 2008.
- Kan, Shirley, “Taiwan: Major U.S. Arms Sales Since 1990.”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
- Kurlantzick, Joshua,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2007.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 for FY 2011 and beyond*, 2010.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nited States,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2008.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nited States,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the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2013.
- Rowan, Joshua,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ASEAN,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sian Survey*, vol. 45, no. 3, 2005.
- San Pablo-Baviera, Aileen, “The China factor in US alliances in East Asia and the Asia Pacific.”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7, no. 2, 2003.
- Sutter, Robert, “Assessing China's Rise and US Leadership in Asia - growing maturity and bala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9, no 65, 2010.
- Suzuki, Motoshi, “The politics of coordination and miscoordination in the post-Cold War United States-Japan alliance: from a Japanese perspectiv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0, no. 3, 2010.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3*, 2013.
- US Congres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3.
- Wilson, Dominic and Roopa Purushothaman,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Global Economics Paper No: 99*, New York: Goldman Sachs, 2003.
- Zhao, Quansheng, “America'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and Sino-US Relations.”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3, no. 2, 2005.
- “China warns against U.S. F-16 upgrade for Taiwan.” *Reuters*(online), 21 Sep. 2011,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9/21/us-usa-taiwan-idUSTRE78K70420110921>(검색일: 2013.4.25).

- “China’s military build-up threatens Taiwan.” *Newsweek*(online), 18 Sep. 2010, <http://newsweek.com.au/article.php?id=4510>(검색일: 2014.4.25).
-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Sovereignty Issues in Asia.” *US Department of State*(online), 20 Sep. 2012, <http://www.state.gov/p/eap/rls/rm/2012/09/197982.htm>(검색일: 2014.4.28).
- “National Security Strategy.” *Cabinet Secretariat*(online), 17 Dec. 2013, <http://www.cas.go.jp/jp/siryu/131217anzenhoshou/nss-e.pdf>(검색일: 2014.5.18).
- “Pivot to Asia: Prepare for Unintended Consequence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online), 13 Apr. 2012, <http://csis.org/publication/pivot-asia-prepare-unintended-consequences>(검색일: 2014.4.28.).
- “Revise Article 9 for UN military action: PM Abe on TV.” *Japan Press Weekly*(online), 6-12 Mar. 2013, <http://www.japan-press.co.jp/modules/news/index.php?id=5331>(검색일: 2014.8.3).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Stockholm Peace Research Institute*(online), <http://milexdata.sipri.org/files/?file=SIPRI+military+expenditure+database+1988-2013.xlsx>(검색일: 2014.4.12).
- “South China Se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online), 7 Feb. 2013. <http://www.eia.gov/countries/regions-topics.cfm?fips=scs>(검색일: 2014.6.1).
- “The Senkaku Islands Dispute: Oil Under Troubled Waters?” *Cryptome*(online), Jul. 2013, <http://cryptome.org/2013/07/guccifer-cia-senkaku.pdf>(검색일: 2014.4.28).
- “Why are South China Sea tensions rising?” *BBC News*(online), 3 Sep. 2010,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152948>(검색일: 2014.5.16.).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nternational Monetary Fund*(online), 8 Apr. 2014.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weodata/index.aspx>(검색일: 2014.4.12.).

## ABSTRACT

China’s Rise and U.S.–Japan Alliance  
: mutual perception, strategies and issues

Seol, Gyoo–Sang(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ina has emerged as the second largest economy by Gross Domestic Product owing to dynamic growth for a generation. She now tries to change the regional order by increasing her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based on such growth. But such an attempt is creating new tension with other major regional powers who are seeking to contain China’s uncontrolled behavior. It accordingly increases uncertainty of the East Asian regional situa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s the action taken by the U.S. and Japan in the alliance system to deter China’s aggressive actions and China’s response from the point of interaction, along with the implication which China’s rise provides to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After scrutinizing the issues, the writer concludes that any countries concerned would not make extreme choices to the extent that ongoing conflict would eventually drive the region into catastrophe, even though the conflict runs high because of the reinforcement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based on the alliance to confront China’s power projection with her rise and China’s adherence to assertive stance on major issues.

Keywords : China’s rise, U.S.–Japan alliance, Sino–U.S. relations,  
Sino–Japan relations, East Asia, regional security

투고일: 2014년 6월 30일, 심사일: 2014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31일